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60
----------	-------

발의연월일 : 2022. 4. 21.

발 의 자 : 김미애 · 조명희 · 박대수
태영호 · 최승재 · 하태경
백종헌 · 황보승희 · 윤두현
정경희 · 김선교 · 홍석준
조오섭 · 최재형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입양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2013년에 서명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은 국가의 입양절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가된 단체를 통하여 입양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입양업무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입양아동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입양의 일선집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나. 법 적용대상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한정하며, 제정 목적을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통한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 향상으로 함(안 제1조).

다. 친생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른 새로운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라. 국가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마. 입양이 성립된 이후 다시 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가족이 만나는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동의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 원칙을 침해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안 제3조제5항).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8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내입양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입양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함(안 제15조).

차.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함(안 제17조).

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이 양자 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한 사전조사 및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및 숙려의 지원, 입양 신청, 아동의 인도 및 사후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입양기관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5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상거소(常居所)”란 주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기간 이상을 거주한 장소를 말한다.

5. “국내입양”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과 아동의 상거소 및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으로,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상거소 및 국적이 다른 국가로 변경되지 않는 입양을 말한다.

6.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입양아동에게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시행 및 홍보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된 사람과 친생가족 간의 만남을 위하여 당사자 상호동의 및 사생활 자유의 보장 원칙 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

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보호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시설보호 아동에 대하여 현재 양육방식의 적정성을 최소 3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원 가정과의 재결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2장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8조(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입양활성화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시설보호 감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입양아동·입양가정에 대한 차

별방지를 위한 주요 정책

5. 국내입양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0조에 따른 입양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내입양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입양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입양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입양정책조정위원회) ① 국내입양촉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입양정책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양부모가 될 사람의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4. 그 밖에 국내입양활성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10명 이내 위원
2. 입양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입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성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과반 이상 구성

④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내입양의 요건 및 효력

제11조(양자가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아동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2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 또는 가정위탁센터에 보호의뢰한 아동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보호의뢰한 아동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충분한 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경력이 없을 것
4. 약물중독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5. 혼인한 경우 부부 공동으로 입양할 것
6.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

②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부모가 될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상담, 건강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입양의 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은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양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 가정환경 조사,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입양의 신청 방법·절차 및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시인도결정) ①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입양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이하 “임시인도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1주일 이내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인도결정을 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

5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인도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학대·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인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아동을 보호할 자를 지정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즉시 아동의 인도를 명령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시인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법원이 임시인도결정을 한 때부터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때까지 아동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적응 및 양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임시인도결정의 신청 절차, 심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11조제1항에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보고서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보고서

4.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의·승낙 서면 및 제2항에 따른 동의 서면

5.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입양의 동의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제15조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양자가 될 아동의 승낙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

② 제11조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친생부모인 경우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승낙, 제1항제2호에 따른 승낙 또는 제2

항에 따른 동의는 제15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승낙, 제1항제2호에 따른 승낙,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제17조(입양동의 등의 요건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의·승낙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입양동의등”이라 한다)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 등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승낙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승낙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제16조제2항의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에게 입양동의 등의 전까지 숙식, 의료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19조(입양의 효력발생)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입양의 취소) ① 입양아동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낙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입양아동의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아동 또는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의 인용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친생부모·양부모·입양아동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1조(과양) ① 양부모,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과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정법원은 과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과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친생부모·양부모·입양아동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장 입양기관 등

제22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제도 설명 등 입양 관련 서비스 제공
2.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친생가족 찾기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양육
5. 제12조제3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국내입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⑤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허가 및 변경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입양기관의 의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의 업무수행 내용을 매년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 될 아동을 인도받

왔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6조제4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및 보호

제25조(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법원의 임시인도결정과 제15조에 따른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한다.

제26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4.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에 필요한 서비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이하 “양육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을 빌미로 부당하게 가정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호의뢰된 아동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아동

2. 이 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아동

제6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29조(입양기록의 보존 및 이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입양기관의 장,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전자문서 형태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이하 “입양기록”이라 한다)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입양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휴업 예정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양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기록의 범위 및 내용, 제2항에 따른 입양기록의 제공 및 영구보존, 제3항에 따른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업

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입양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입양업무 또는 입양 전 아동보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장 지도·감독 등

제33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4조(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2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경우
 6. 제36조에 따른 비용보조 이외에 정당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청문) 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4조제6항,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권리보장원의 임직원 및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사람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 등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에 관한 업무를 행한 사람

4.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임시인도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은 사람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사람

③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입양기록의 보존 및 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입양기록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보존 및 이관 등에 관한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입양기관 등이 기록한 입양기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조사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의 요보호아동”을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아동”으로 한다.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입양특례법」 제20조”를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로 한다.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5호 중 “「입양특례법」 제20조”를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특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